

**2014년 6.4지방선거 새누리당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후보**

장애인 권리보장 정책공약화 질의 답변

인천광역시장 후보

유정복



- 인천광역시의 장애인의 권리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인천장애인철폐연대의 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6·4 지방선거를 맞이하여 귀 단체가 질의하신 내용에 관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 귀 연대가 질의한 궁극적인 목적은 ‘장애인 차별 없는 인천광역시’ 구축이라 생각되며, 이는 우리 사회가 함께 구축해야하는 지향점입니다.
- 이를 위해서 지금까지 ‘시혜’적 관점에서 시행되던 인천광역시의 장애인복지정책의 패러다임이 ‘권리’로 변화시킬 것이며, 이를 통해 장애인당사자들이 비장애인들과 평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1.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 전면 보장 정책

- 탈시설 욕구조사를 토대로 탈시설 중·장기 계획 수립
 - 탈시설은 시설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안입니다. 지금까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대규모 장애인 시설에서의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미 장애인복지법이 개정을 통하여 장애인주거시설의 규모를 30인 이하로 제한하였습니다. 이미 서구 국제 사회에서도 대규모 장애인주거시설을 폐쇄하거나 소규모화하여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생활시설 이용자 복지실태 및 탈시설 욕구조사(인천발전연구원, 2012)」의 결과에서도 30.5%의 시설장애인들이 탈시설 의향이 있다는 것은 탈시설 정책의 필요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 시설장애인의 탈시설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인천광역시의 다양한 사회적 기반과 환경을 고려한 중장기 탈시설 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 탈시설 전환센터 설치

- 탈시설을 원하는 시설장애인이 탈시설하여 자립생활을 영위함으로 지역사회와의 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원을 발굴하여 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이는 탈시설을 원하는 장애인당사자 개인이 해결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며, 이를 위한 현재 인천광역시 장애인정책도 미흡한 상태입니다.
- 현재 가동되고 있는 체험홈이나 전환주택의 장단점을 보완하여 인천광역시에 적합한 센터모델을 모색하겠습니다.

-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자 발굴에 대한 계획을 마련하고 탈시설 초기 정착금 대상자 선정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
 - 2014년도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서에 의하면, 탈시설 초기정착금이 5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대상자 1명 당 500만원, 10명에게 지급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지급하고자 하는 10명의 대상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전무한 상태라는 사실은 현재 인천광역시의 장애인복지정책이 얼마나 ‘시혜적이고 잔여적인’ 관점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

- 탈시설 초기정착금 대상자 선정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2. 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 보장 정책

○ 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 보장

- 활동지원서비스는 중증장애인당사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적극적인 사회참여와 화재 등 위기상황에서의 대피 등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장애인정책입니다.
- 그러나 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 보장은 중앙정부의 차원에서 여전히 풀어나가야 할 과제로 남아있는 것이 사실이며, 현재 인천광역시에서도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인천광역시가 초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 지원을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우선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그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 본인부담금 폐지

- 활동보조서비스 자부담은 빈곤문제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중앙정부 차원으로 시행되고 있는 활동보조서비스 자부담 제도를 지방 자치단체인 인천광역시가 폐지할 수는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활동보조서비스가 꼭 필요 하나 자부담 미납으로 인해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장애인당사자들에게는 인천광역시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3. 장애인자립생활지원 중장기 계획 수립

○ 자립생활지원 중장기 계획 수립

- 자립생활과 탈시설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음으로 연동하여 추진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되며, 인천광역시의 다양한 사회적 기반과 환경을 고려한 자립생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 자립생활센터 매년 2개소 시지원 확대

- 인천광역시 장애인의 자립생활 욕구를 기반으로 한 자립생활 정책이 시행됨으로 인천광역시 장애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어야 합니다. 장애인당사자의 자립생활 욕구와 지역적 자원을 기반으로 적정한 자립생활센터를 연차적으로 설치하겠습니다.

○ 자립생활센터 시지원 예산 증액

- 장애인당사자의 자립생활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려면 자립생활센터의 업무역량강화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 적정한 업무시스템과 역량을 갖춘 자립생활센터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4. 장애인 이동권 보장

○ 2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에 따라 저상버스 확충계획을 즉각 이행

- 장애인 이동권 확보는 장애인의 교육과 노동 그리고 사회참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 특히 저상버스는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사회적 접촉을 활발하게 만들고, 인간의 기본적인 삶의 요소인 이동의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공공교통수단입니다
- 이를 위해 인천광역시의 조례가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상버스 실제 도입률이 낮게 나타나는 문제는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인천광역시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 현재 제정되어 있는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적합하게 저상버스를 도입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장애인 콜택시 저녁 및 심야시간대 콜택시 운행을 현행 2배로 확대

- 저녁 및 심야시간대에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려는 장애인들은 낮 시간 이용자보다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인천광역시의 장애인콜택시 이용자들의 훨체어 이용여부를 파악하여 특성에 적합한 운행모델을 구축하여 대기시간을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 전체적으로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안과 특히 심야시간의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증차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지하철2호선 무인화 계획 폐지 및 안전인력 배치

- 장애인이동권의 최후의 보루는 지하철 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인천광역시 지하철 2호선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확장시키는 데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 일반시민의 안전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발생된 지하철 장애인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무인화계획을 폐지하고 안전인력을 배치하여 지하철 2호선의 안전을 극대화시키겠습니다.

5. 장애성인 교육권을 보장하라!

○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인건비 지원

- 2011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장애인의 교육 수준은 비장애인에 비하여 낮은 상태이며, 무학 및 초등학교 학력 소유자가 44.7%에 달합니다.
-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 현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비 및 프로그램비 지원은 인천광역시와 인천시 교육청에서 양면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타 시도에 비하여 미흡하다고 비판받고 있습니다.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원을 확대할 것입니다. 인건비 지원 부분은 인천지역 장애인단체 등과의 지원의 형평성과 수준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 장애인평생교육관 백지화 및 장애인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확대

- 장애인평생교육관 건립과 기존의 학력인정시설의 지원에 관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타당성에 대한 심층 검토와 의견수렴을 통하여 평생교육이 필요한 장애인당사자에게 효율적인 교육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 확대를 위한 예산을 확대하겠습니다.

6.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

○ 발달장애인 직업교육센터 설치 및 발달장애인 지원고용 확대

- 지금까지의 발달장애인 대상의 전통적인 직업훈련방법은 직업훈련원에서 이론교육에 중점을 둔 training off the job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근래에 들어서는 지원고용과 같은 훈련 모델인 training on the job 방식이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인천폴리텍Ⅱ대학 형태의 발달장애인 직업훈련방식이 효과적인지 지원고용의 확대가 효과적인지 연구하여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직업적 특성에 적합하며 취업에 적합한 방안을 마련하여 발달장애인의 직업재활과 고용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 지자체 직업보호작업장 설치

- 일반적으로 보호작업장은 1차 노동시장으로의 이입이 어려운 직업적 중증장애인들을 위해 개발된 작업장 모델입니다.
- 이러한 직업훈련 및 고용모델이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보호작업장의 확대는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고용안정을 위해 많은 기여를 할 것입니다.
- 인천광역시 중증장애인 보호작업장의 중장기적 확대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지자체 공공기관 발달장애인 고용 시범사업 실시 및 발달장애인 취업지원, 새로운 고용모델 개발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및 공단 인천지사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인천광역시 및 인천지역 공공기관에 발달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하여 고용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이를 통해 인천지역의 발달장애인 취업 지원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유형과 직업적 특성을 고려한 고용모델 개발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장애학생을 위한 방학 중 계절학교를 운영

- 학령기의 학생들에게 방학이란 학교교육을 통해 경험할 수 없는 다양한 사회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일부 장애인 가족들에게는 경제활동 제한과 휴식의 제약을 가져오는 양면의 날과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 이와 관련한 본질적인 문제는 장애인 가족지원의 내실화가 관건이라 생각됩니다.
- 방학기간 중에 계절학교 운영에 관한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